‘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 편중…광주 첨단산단 빈껍데기 될 판

지방 죽이는 역주행 국가균형발전 정책

광주·전남 해외유턴기업 최근 3년 1곳 불과한데 수도권 규제 풀고 지방이전 인센티브 줄여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非)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는 방안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처리 지연과 함께 지방의 첨단산업 육성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기업유치 악영향=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제혜택을 준 것은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만들면서부터다.

이 때만해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세제혜택 유턴기업의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의 유턴기업은 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혜택을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턴기업의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을 검토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용히 추진했고,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법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2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 상당수가 이같은 독소조항이 법안에 반영돼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방으로 옮겨올 기업에 대한 또다른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에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범위를 “해당기업이 다른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주지않겠다”는 것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경우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취지여서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럴 경우 가뜩이나 기업유치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수도권 기업 유치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등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매년 32.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는 지난 2011년 단 한 곳만이 수도권에서 옮겨 왔고 이후에는 전무하다.

같은 기간 전남은 30곳으로 집계됐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집중되다 2012년 7곳, 2013년 4곳, 2014년부터는 매년 1건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박근혜 정부는 규제 프리존에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4차산업 혁신도 수도권 몫인가=정부가 판교창조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각 지역의 혁신산업 추진 주체들은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혁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탄핵정국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의 입법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처리가 장기 지연될 조짐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규정된 혁신산업에는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수소 융합 스테이션) ▲에너지 신산업(전력변환·저장)사업과 전남도의 ▲에너지 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지역의 혁신산업이 수도권 중심의 4차 산업육성책으로 또다시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올해 시정 방향으로 ‘산업지형 재편’을 꼽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광주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산일보=박석호기자

■ 유턴기업 세제혜택 내용

구분	복귀 유형		관세감면율(한도)	법인 및 소득세 감면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국내 사업장 없을 경우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100%(2억원)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증설	50%(1억원)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국내 사업장 있을 경우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100%(2억원)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증설		

■ 지역별 규제프리존 4차 산업혁명 분야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화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측 법률 대리인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측 색깔론까지 동원한 황당 논리에 방청석 곳곳 헛웃음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측 재판장에 제지 요청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던 방청객은 고개를 숙이고 웃기도 하고, 일부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 측의 자료유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백발의 노인부터 가족 단위로 왔을 법한 어린이와 청소년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대통령 측의 강변에 대해 국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 2차 변론 나흘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

“세월호 당일 오전 박대통령, 안봉근 독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독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이 집무실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윤 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을 대면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 집무실을 가려면 제 사무실을 거쳐 가야 한다”며 “당시 문을 열고 있어서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윤 행정관은 자신이 오전 8시 30분께 박 대통령의 호출로 관저에 가 ‘개인적 업무’ 혹은 ‘비공식적 업무’를 본 뒤 관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며, 박 대통령이 오전 9시에 관저 내 집무실에 들어간뒤 오전 중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자신은 세월호 침몰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시청 여부는 모른다고 기억했다. 그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증언한 ‘의료용 가글’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전 중 올려드린 뒤 인터폰으로 말씀드린 것 같다”며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다.

윤 행정관은 “당일 외부인은 헤어·미용 빼고는 부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후에 상황이 급변해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사를 제가 모시고 와야 해 모시고 왔고, 모셔다드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